

특수건강진단 서비스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산업의학과 우극현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법적인 의무 준수에만 관심을 가질 뿐 유소견자 발견에 따른 인사문제 및 작업환경 개선 비용의 지출을 원하지 않습니다. 직업병 유소견자가 1-2명이라도 발견되면 관할 노동사무소로부터 특별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유해인자를 알뜰살뜰 따지거나 대상자를 열심히 찾아내는 기관보다 오히려 적당히 모른 척 해주는 검진기관을 선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1-2만원의 제한된 검사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모두 점검해 주지 못한다고 불신합니다. 강력한 노조가 없는 회사라면 유소견자로 낙인되면 장애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회사에서 퇴출당하더라도 요양승인이 나지 않거나 보상액수가 적은 경우가 허다하며, 적절한 대책도 없으면서 생업에 지장을 받을지도 모르는 건강진단은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몇 년에 걸쳐 여러 곳을 방문해 보고 느낀 점들을 종합해 볼 때도 현행수가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 청력검사, 폐기능 검사 등에 대한 정도관리까지 해 가면서 양질의 근로자 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역사회내 의료기관으로서의 일정역할 담당과 환자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막연

한 생각으로 기관지정을 신청하였고 이미 각종 장비나 시설을 갖추었으니 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없고 더구나 관할지역내 기관간의 경쟁으로 D1판정이라도 하나 내려면 회사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며 노동부 고시수가 “저 기관은 이렇게 해 주는데 당신 기관은 어떻게 해주겠느냐?”는 등 각 기관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회사 담당자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에 포함되어야 할 유해인자나 질환이 다양해질 뿐 아니라, 근로자 단체를 비롯한 사회적 요구는 다양한 종류의 직업병들을 조기에 색출해 주기를 바라는데 상대적으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재의 검진기관들을 부실 의료서비스 제공자로 비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부의 입장도 양질의 특수건강진단 서비스를 위해서는 검진비용의 현실화 등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있을 뿐 아니라, 산업재해 감소라는 목표 달성과 상충되는 문제가 맞물려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 차이를 종합해 볼 때, 문제해결의 핵심은 첫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라는 점과 둘째, 어떻게 특수건강진단업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립할 수 있는가?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1.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전문성 확보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나 직업성 질환의 다양성, 노동조합 등 사회적인 요구 증가 등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특수건강진단 서비스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필수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의학 전문의 중심의 실질적인 업무 활성화가 해결책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훈련된 산업의학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주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내년에는 산업의학전문의 배출이 다른 해에 비해 많은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근무하는 산업의학전문의가 아닌 의사는 현행보다 실무위주의 보수교육을 더 강화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부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기 전에 시설, 장비 등 구조적인 측면위주의 심사보다 책임의사의 전문성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실사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선결과제로 검진수가의 현실화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일단 책임의사의 전문성이 확보되면 대상사업장의 분포 등을 고려한 지역 담당제를 도입하여 해당지역의 소외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과당경쟁을 줄이고 장비, 설비 등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통해 기관의 영세성을 탈피하게 도와줌으로 기관 경영의 안정과 더불어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기구 위주의 실질적인 정도관리 및 실사를 통한 기관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함으로 부실기관의 출현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일반기관과 산업의학, 외래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기관으로 이원화

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보건관리업무, 직업병 감시체계 등의 활용을 통하여 특수건강진단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2. 책임을 동반한 자율성 확보


일단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인 심사를 통한 기관의 지정이 확정되고 그 전문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면 노동부도 기관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아울러 책임도 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산재기금을 더 확보해서라도 정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서 건강관리에 소외되는 근로자가 없게 하고 사업주의 부담도 덜어주며 기관과의 갈등도 없애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행 특수건강진단의 판정기준을 크게 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과 전문기관으로 정밀검사를 의뢰해야 할 대상으로 구분하게 하고, 유해인자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의학과 외래를 확보하고 있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밀검사를 통한 최종 D1 판정을 내리게 하고 보상문제도 함께 다루게 하는 방안도 하나의 연구과제라 생각됩니다.

책임문제에 관해서는 기관이나 사업주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문제 발생시 형평성 있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관과 회사의 책임성을 추궁하게 하고 기관을 실사하는 방식에서 임의로 또는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 위주의 회사 점검 방식으로 전환하는 일은 몇 년간의 계도기간을 통하여 점차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성인병 암검진 등 업무의 통합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유럽 등지에서 연령을 고려한 통합방식의 건강검진을 생일날 유급휴가를 활용하여 원내에서 받게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제도가 이상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 하여도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 제도가 뿌리내리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현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며 그 제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하고 그 간격을 조금씩이라도 좁혀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며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고 집단이기주의에 머물러 있게 될 때 그 어떤 제도도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없음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 하지 말고 장기목표와 단기적인 대안을 일관성 있게 종합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사업장 산업보건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소규모사업장 산업보건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이 2004년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됩니다. 소규모사업장 산업보건분야에 관한 학술적, 인적 교류와 상호 친선을 도모하는 국제심포지움에 산업보건 관계자 및 전문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 2004. 11. 12(금)-15(월)
- 장소 : Nagoya Congress Center, Nagoya, Japan
- 참가비 : 30,000 Japanese Yen (동반자 17,000 Japanese Yen)
참가비 납부 : 2004. 8. 31 까지
- 참가신청 : 협회 홈페이지(www.kiha21.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e-mail: edu@kiha21.or.kr(담당 : 김진희, 전화 : 02-586-2663-5
fax : 02-522-0933)로 2004년 8월15일 까지 제출
- 기타 학회참가를 위한 항공, 숙박, Tour 안내는 추후 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OHSE2004.umin.j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